격월간 NEWS LETTER

더 불 어

(제2호 5·6월)

발행처-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발행인**-최상철 | **기획**-홍보팀 | **홈페이지**-www.region.go.kr

정책 핫이슈

"4대강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회 토론요약-

▲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

범정부 차원의 4대강 살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삶의 질-지역발전까지 겨냥한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다. 지난 4월 27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6개 기관(녹색委·건축委·국토부·환경부·문화부·농림부)과 공동으로 정부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회를 가졌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는 크게 5가지다. ▶첫째, 충분한 용수 확보. 예상되는 물 부족과 이상가뭄을 겨냥한 하도정비와 중소댐 건설에 나선다. ▶둘째, 홍수예방. 200년마다 오는 대홍수도 막을 수 있게 퇴적토 준설과 노후제방을 보강한다. ▶셋째, 생태복원. 유역관리와 하수시설 확충으로 2012년까지 4대강 본류를 2급수로 높인다. ▶넷째, 강변복합공간 조성. 하천에 자전거 길(1,411㎞), 관광·체육시설 등을 만들어 생활·여가·관광·문화공간을 창조한다. ▶다섯 째, 지역발전과의 연계. 강 살리기로 확보된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 전국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4대강 키워드는 '환경' 과 '경제' 다. 물 확보, 홍수예방, 생태복원 등 환경이 1차 목표라면, 최종목표는 4대강 주변지역을 생활·관광·문화의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풍요로운 방방곡곡', 즉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4대강 키워드에서 '지역' 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날 합동보고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에 담을 총체적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토론중심으로 진행됐다. 환경과 경제는 물론 지역발전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2면 계속〉

Contents

- 정책 핫이슈 ····· 1
  "4대강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
- 정책 포커스 ····· 2
  지역발전위원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08년 균특사업 평가결과
- 위원장 메시지 ····· 3
  "발전은 성장+균형입니다"
- 지역 안테나 ····· 4
  논산, "명품딸기 덕에 불황 몰라유"
  대전, 자전거 명품도시로 전국 주목
  광주전남, 천일염·김치로 세계 공략
  대구·경북, 지역민 경제심리 먹구름 걷혀
  경북, 귀농인 지원 조례안 발의···전국 '첫 추진'
  강원, 예산 조기집행 순조···현재 39.6% 집행
  제주, 고용률 전국 '최상위권'
- 중앙 풍향계 ····· 6
  4월말 11.7조원, 계획대비 111.5% 재정집행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세부 프로젝트 확정
  노후산업단지 첨단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
  준산업단지 지정 완화, 6월27일 시행
  지난해 2,218가구 귀농···경북 '최다'
  소규모 面 2개 이상 조례로 자율통합 가능
- 글로벌 인사이트 ···· 8
  해외정책 사례연구 - 일본 광역발전계획

"발전은 성장+균형입니다"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우리의 각오-

지난 4월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로 바뀌었습니다. 기관명칭에서 균형이 빠지자, 균형발전의 후퇴로 오해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런 오해는 균형이란 표현이 갖는 상징적 기대가 너무 큰 탓입니다. 불균형보다 균형이 좋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이지만, 균형만이 지역발전의 궁극목표는 아닙니다. 균형도 지역발전의 목표중 하나이지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장 없는 균형은 나누어 먹기 일뿐입니다. 성장 없는 균형은 하향적 평준화입니다. 균형 없는 성장 역시 모든 불평등의 원인입니다. 발전은 성장과 균형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도 지역의 성장과 지역 간 균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균형이 주어진 '파이'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면, 발전은 '파이'를 키워 돌아가는 몫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점수를 깎아내려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보태주는 것이 교육발전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냥 그대로 두고, 공부 못하는 학생을 끌어 올리는 것이 교육발전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사는 지역의 발목을 잡지 말고, 못사는 지역을 잘 살도록 해야, 상생발전이 가능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철학에 발맞춰 지역발전의 패러다임과 전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 즉 수도권의 발목만 잡으면 비수도권이 발전할 것이라는 제로섬의 논리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수도권은 스스로 크도록 놓아두고, 비수도권의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이미 비수도권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6개 시·도를 7개(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선도산업 육성,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51.5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남해안 선벨트처럼 광역경제권을 넘어서는 초광역개발권 같은 중장기 개발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도시의 구를 제외한 163개 기초자치단체인 시 · 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생활권 개발도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권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발방법을 지양하고, 지방 스스로가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꼬리달린 각종 국고보조금을 자치단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재정의 자조적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꾼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각오로 지역과 지방을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철

'08년 균특사업 평가결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기관정비」

지역발전위원회가 5월 말 '08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를 마쳤다. 지난해까지 지경부와 행안부로 나눠 평가했지만, 올해는 지역위로 일원화하고, 지역발전사업평가단도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다. 평가대상사업은 혁신계정에서 38개 1.3조원, 개발계정에서 56개 4.1조원이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부문(부처)평가의 경우 우수 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또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사업 추진기관도 정비·단순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업추진도 기존 시·도 단위에서 광역경제권으로 개편된다. 포괄보조금을 통한 자율화·효율화와 함께 공정한 평가와 성과관리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향후 광특사업은 지역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정기평가와 함께 부실한 사업에 대한 수시평가도 실시한다.

충청권 논산, "명품딸기 덕에 불황 몰라유"

논산딸기가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 수입개방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논산딸기는 민관이 머리를 맞댄지 7년 만에 당도 높은 새 품종을 개발, 끊겼던 일본수출 길을 열고, 지난해 매출도 1,000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최근 수출물량만 76만 7,000달러(101톤)에 달한다. 올해는 50톤 이상이 일본·대만·싱가폴·러시아 등으로 팔린다. 논산딸기 축제에는 지난해 100만 명이 몰렸고, 딸기수확 체험에도 관광객 10만 명이 다녀갔다. 한편, 농산물 수출로 부자 된 시골마을은 논산뿐만이 아니다. 군산 쌀은 지난 2007년 이후 미국·러시아·영국·뉴질랜드·두바이 등 7개국에 300톤이 팔렸고, 천안 배도 지난해 1,600만 달러(7,192톤)를 수출한데 이어, 진주도 2,455만 달러어치의 순수 농산물을 해외에 팔았다.

▲논산 딸기축제에 참가한 외국인들

〈 논산딸기 현황 〉

재배면적	849 ha
생산량	2만 6,438톤 (전국대비 13%)
재배농가	1,922 가구
농가당 소득	5,196 만원
딸기 가공업체	3개
딸기축제	관광객 100만 명, 200억원
딸기수확 체험	연간 10만 여명, 10억원
딸기수출	76만 7,000달러 (101톤)

대전, 자전거 명품도시로 전국 주목

대전광역시가 자전거 명품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25일부터 9 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 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의 주요거점도시로 대전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자전거 명품도시' 에 걸맞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이며, 이번 대회에 이어서 8~9월께 다시 자전거 축전을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 녹색교통의 메카' 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말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호남권 광주전남, 천일염과 김치로 세계 공략

▲전남 천일염 염전

▲광주 김치나눔 사랑메세나 현장

전남 천일염과 광주 김치가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천일염이 지난해 3월 '광물' 에서 '식품 ' 으로 바뀐 후, 올해 전남지역의 천일염 수출량은 지난해 보다 무려 250% 증가한 154만6,000만 달러에 이른다. 국가도 미국·독일·일본 등으로 다양하다. 전남은 천일염을 향후 프랑스 '게랑드 소금' 같은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 고급화에 한창이다. 천일염 국내 생산량은 연간 29만6,000톤으로 이 가운데 87%인 25만 8,000톤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광주는 오는 10월23일부터 10일간 '김치, 천년의 맛' 을 주제로 김치축제를 연다. 지난해까지 15회째 김치축제를 지속해온 경험과 반성을 통해 김치축제의 발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김치만을 주제로 하기보다는 김치축제를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축제' 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경권 대구·경북 지역민, 경제심리 먹구름 걷혀

대구·경북지역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4월 지역 소비자동향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실시한 '5월 중소기업경기전망' 도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주식 등 자산 가격상승, 금융위기 완화로 경기선행지표가 개선되고 대경권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가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지난 3월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 지원 조례안 발의, 전국 '첫 추진'

경상북도 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5월초 '경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기침체 속에서 성장배경이 농촌이면서 일정한 교육수준과 자산을 보유한 도시민들의 귀농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귀농지원을 통한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 예산범위 내에서 ▶농업기반 확충 및 생산 ▶정착 및 주거▶농업현장 연수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영농기술 교육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귀농안내 책자

강원권 예산 조기집행 순조, 4월말 현재 39.6% 집행

강원도의 예산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 조기집행 목표액 8조6,895억원 가운데 4월말 현재 집행률 39.6%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각 시·군이 집행해야 하는 예산 11조7,929억원 가운데 조기집행 목표는 8조6,895억원으로, 4월말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3조4,439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군 단위에서는 집행률 기준으로 평창이 45.5%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양양(40.5%)과 고성(40.5%), 인제(39.0%)가 그 뒤를 이었다. 철원(30.9%), 영월(32%), 정선(35.3%) 등은 비교적 조기집행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순위지역에 비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물량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권 제주 고용률, 전국 '최상위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주시는 서비스업, 서귀포시는 농림어업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최근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10개 도 158개 시·군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해 발표한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제주시 21만1,000명, 서귀포시 8만4,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제주시가 68.0%, 서귀포시는 70.3%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제주시는 61.1%, 서귀포시는 61.3%로 다른 지역의 40~60%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제주시의 경우, 산업별 취업자 비중이 사업·개인·공공서비스가 34.0%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은 17.7%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39.4%로 제주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는 25.9%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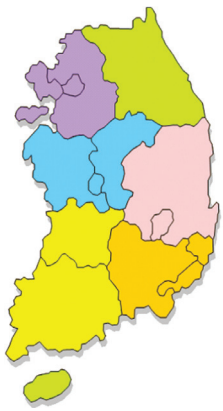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4월말까지 110.7조원, 계획대비 111.5% 재정집행

3.8

지식경제부 노후산업단지 첨단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지난 4월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을 선보였다. 개선안은 노후 산업단지를 2012년까지 첨단지식단지로 바꾸고,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때 필요한 토지용도 변경절차도 대폭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발(국토해양부)과 관리(지식경제부)를 각각 다른 부서가 맡으면서 중복절차, 과다비용 문제가 심각했던 복잡한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1평짜리 창고를 공장으로 바꾸는데 3개월이 걸리고, 5,000만원이 드는 기형적 절차를 1개월에 끝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수출액 가운데 53.2%, 생산액 37.1%, 고용 24.7% 을 차지하는 등 국내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 입주기업의 80%가 노후단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이 민간으로 매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14개 지방공항 중 청주국제공항을 민간 매각대상으로 선정했다. 14개 지방공항 중 1위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여객과 화물 처리물량이 저조한 적자공항이지만,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추세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커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매각 추진전략 및 공공성 확보방안 검토 등 전문 컨설팅을 7월말까지 실시하고, 매각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 등 내년 초까지 인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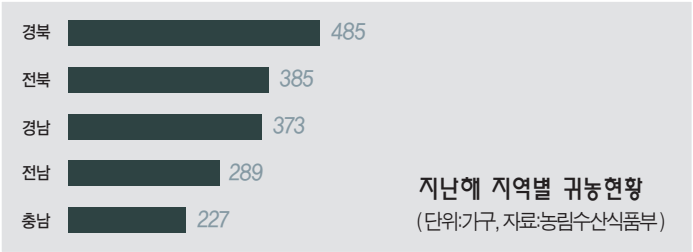
▲청주공항

국토해양부 준산업단지 지정 완화, 6월27일 시행

국토해양부가 오는 6월 27일부터 준산업단지 지정을 완화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개정안' 에 따르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의 50%이상' 인 경우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의 50%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었던 것도 '공장부지와 물류시설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이상' 인 경우로 바뀌었다. 또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건축물이 5개 이상인 경우' 도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 정비를 위해 2007년 10월 도입됐으나, 지정기준 제한, 지원기준 미비 등으로 아직 지정실적이 없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난해 2,218가구 귀농, 경북 '최다'

지난 해 귀농가구가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경북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 수는 2,218가구였다. 이는 2007년 2,384가구보다 소폭 줄어들었지만, 2006년(1,754가구), 2005년(1,240가구)보다는 많은 것이어서 '귀농현상' 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경북에 485가구가 정착해 가장 많았고, 전북(385가구), 경남(373가구), 전남(289가구)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가 699가구로 가장 많았고, 50대(632가구), 60대 이상(528가구), 30대(328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귀농현황
(단위:가구, 자료: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소규모 面 2개 이상 조례로 자율통합가능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말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소규모 인구의 面 2개 이상을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행정面제도' 가 도입되고, 새만금과 같은 매립지나 미등록 토지의 귀속문제를 놓고, 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할 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현재 매립지나 미등록 토지 귀속문제를 놓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은 새만금과 송도국제도시, 시흥시화개발지 등 27곳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한국방송공사 임직원 등을 추가했다.

해외정책 사례연구 - 일본

일본,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총괄조직 신설·단계적 수립·행정개편 추진-

일본은 1962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과밀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종합개발계획' 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균형발전을 목표로 공장·교육기관 등을 지방에 분산, 지역의 중추·핵심도시 성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세계화·분권화 흐름에 역행한데다,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安全·安心·安定실현' 을 목표로 하는 성숙사회에 걸맞는 계획체계나 목표가 없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본 지역정책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다. 정책기조를 ▶국토개발→국토이용·정비·보전 ▶국가주도 전국계획→지방주도 광역계획(협력계획) ▶균형발전→지역간 경쟁과 특화발전으로 각각 변경하기 시작했다.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전국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반성의 결과다. 먼저 '국토종합개발법' 을 '국토형성계획법' 으로 바꾸고, 국가주도의 '전국계획' 과 지역주도의 '광역계획' 으로 분리하는 국토정책을 수립했다. 전국계획은 지난 2008년 확정해, 현재 광역별로 광역지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일본 사이타미현 관동지방정비국 관계자들로부터 광역지방계획 현황 자료를 받고있는 지역위 방문단

일본 지역정책의 변화가 주는 시사점은 3가지다. 첫째, 지역정책 총괄조직의 신설이다. 총리 산하에 '지역활성화 통합본부' 를 구성, 총괄기획 및 부처조정 기능을 맡겼다. 이는 우리의 지역발전위원회(舊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유사하다. 일본이 총괄기구로 부처협력 촉진, 중복사업 조정 등에서 성과를 냈듯이, 우리도 부처·지역·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발전계획의 점진적·단계적 수립이다. 일본의 광역발전계획은 국토형성계획법('05.12 제정)을 근간으로 전국계획('08.7완료), 광역지방계획('10년 완료예정)을 순차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계획간 정합성 제고·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여왔다. 현재 광역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있는 우리가 꼼꼼하게 참고해야 할 측면이다.

셋째, 행정개편 문제도 논의 중이다. 일찍이 일본은 소도읍체계인 시정촌(市町村)의 합병을 통해 기존 3,232개('99년) 시정촌을 1,821개('06년)로 합병했고, 내년 2010년까지 1,760개로 합병할 목표로 구역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사례는 광역행정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역위 정책연구팀 김헌진 전문위원

▲일본 도쿄도청에 마련되어 있는 "전국 지자체 관광PR코너" 모습

▲47개 도도부현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과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실시